

제 60 회 변 리 사 시 험 대 비

디 자 인 보 호 법 개 정 사 항

－ 제58회 1차 시험 (2021.02.27.) 이후 개정사항 －

[시행령] [시행 2021. 04. 01.] [대통령령 제31577호, 2021. 03. 30.,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1. 06. 23.] [법률 제17725호, 2020. 12. 22.,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3호, 2021. 04. 20.,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02. 03.] [법률 제18815호, 2022. 02. 03.,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02. 18.] [법률 제18404호, 2021. 08. 17., 일부개정]

－ 제59회 1차 시험 (2022.02.19.) 이후 개정사항 －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04. 20.] [법률 제18500호, 2021. 10. 19.,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06. 10.] [법률 제18886호, 2022. 06. 10.,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8호, 2022. 10. 18., 일부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04.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8호, 2022. 04. 19., 일부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1호, 2022. 12. 19., 일부개정]

이 준 권 변리사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01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25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법적 성격의 유사성이 있는 기존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었음.

따라서 침해자의 양도수량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침해자가 그 초과수량 만큼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게 되어 오히려 특허의 침해가 이득이 발생할 수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법」은 손해액의 추정 방식을 지난 2020년 6월 개정한바, 지식재산 관련 법률이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7526호, 2020. 10. 20.,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7725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div> 1. 그 물건의 양도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div> <div>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div>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물품성이 있는 것만을 보호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이 출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신기술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 형태가 없거나 물품에 표시된 형태가 아니어서 디자인 그 자체로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이미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권 확보의 어려움은 국내의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이에 **화상을 물품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능성이 있는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화상에 대한 실시행위를 새롭게 규정**하여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7725호, 2020. 12. 22.,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093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 략) <신 설> 3. ~ 6. (생 략) 7.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기기(器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 6. (현행과 같음)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디자인에 관한 행정심판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 디자인 심판은 특허·상표 심판과 다르게 심판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는바, 디자인 심판의 절차를 특허 및 상표 심판 절차와 통일하기 위하여 디자인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연장권자를 특허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심판청구서 외의 신청서 등에 법정 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해당 신청서 등을 각하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500호, 2021. 10. 19.,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81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 ★ ①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8조 (심판청구의 각하 등) ① (생략)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u>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u>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8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 ① (현행과 같음)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u>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26조 제2항 또는 제12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결정으로 각하</u>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등록료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등록료와 수수료를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면액을 추징하고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디자인등록출원 1개월 이내에 이를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인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심판 또는 소송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심판과 조정의 연계를 통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적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 등에 대하여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86조제2항).

나. 등록료와 수수료를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액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출원인의 감면 혜택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86조제3항 신설).

다. 디자인등록출원 1개월 이내에 이를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출원인에게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하도록 함(제87조제1항제3호).

라.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146조의2 신설).

마.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제152조의2 신설).

바. 심판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조정을 위하여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함(제20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093호, 2021. 4. 20.,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404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생략) ② 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p>③ 제2항에 따라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p> <p>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등록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p> <p>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p> <p>1. 2. (생 략)</p> <p>3.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및 우선권주장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 다. (생 략)</p> <p>4. ~ 8. (생 략)</p> <p>②·③ (생 략)</p>	<p>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p> <p>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3.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4. ~ 8.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146조의2(적시제출주의) ★★</p> <p>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p>
<p>〈신 설〉</p>	<p>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p> <p>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p> <p>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p>
<p>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p> <p>①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p> <p>1. (생 략)</p> <p>〈신 설〉</p> <p>2. 3. (생 략)</p> <p>② (생 략)</p>	<p>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p> <p>①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제15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p> <p>2.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개정이유

분할출원 시 출원인의 실수 등으로 우선권 주장 취지의 기재 등이 누락될 경우 우선권 주장 기간 이내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나 자기가 공지한 디자인으로 인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디자인등록결정 이후 등록료 납부 전까지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자인등록의 무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경매 등에 의해 타인에게 공유인 디자인권이 이전되더라도 디자인권자가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에 그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자인권자를 보호하며,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및 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출원인 및 권리자에게 충분한 심판청구기간을 제공하여** 심판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제고와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무효처분의 취소나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권의 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84조제1항).

나. **재심사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며, 재심사 청구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시기를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서 재심사 청구기간으로 확대함(안 제48조제4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

다.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가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을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50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디자인등록결정 이후 심사관이 명백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및 제195조의2 신설 등).

마. 경매 등에 의해 타인에게 공유인 디자인권이 이전되더라도 디자인권자가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에 그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

바.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되도록 함(안 제111조제2항 신설).

사.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및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도록 함(안 제119조 및 제120조).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404호, 2021. 8. 17.,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500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8조(절차의 무효) ① (생략)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 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18조(절차의 무효) ★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 1. (생략)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제64조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때 3. (생략) ⑤ (생략)	2. 제6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보정각하) ① (생략)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④ (생략)	제49조(보정각하) ★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출원의 분할)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제50조(출원의 분할) ★★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할 수 있다.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신설> ② (생략)	제63조(거절이유통지) ★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디자인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재심사의 청구)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제외한다)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20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제64조(재심사의 청구) ★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제외한다)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20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제35조제1항, 제37조제4항, 제40조부터 제42

	<p>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p> <p>2. 그 디자인등록결정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p> <p>3.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p> <p>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 ⑥ (생략)</p>	<p>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p> <p>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점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110조(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p> <p>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전에 그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p>	<p>제110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p> <p>디자인권자(공유인 디자인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p>
<p>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디자인권 소멸)</p> <p>(생략)</p> <p>〈신설〉</p>	<p>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p>
<p>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p> <p>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p> <p>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p> <p>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p> <p>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의 특례)</p> <p>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르면 친고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고소하지 못하도록 고소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위 제한된 고소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침해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할 수 없게 되거나 디자인권 침해가 불분명하더라도 고소기간이 도과하기 전 고소를 남발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침해사실을 인지하여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가 없이도 수사의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되,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는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디자인권과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815호, 2022. 2. 3.,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886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20조(침해죄) ① (생 략) ② 제1항의 죄는 <u>고소가 없으면</u>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0조(침해죄) ★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죄는 <u>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u>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가 과오납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고,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되,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특허청이 디자인등록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디자인등록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886호, 2022. 6. 10.,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998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u>3년</u> 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u>5년</u> 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01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7호, 2021. 3.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밀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경우 출원인이 지정한 기간 동안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를 등록디자인공보에 게재하지 않도록 하고, 특허 심판원에서 각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심판장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제10조(디자인공보) ★★★

①법 제212조 제1항에 따른 디자인공보는 등록디자인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

②법 제90조 제3항및제212조 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법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 제2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¹⁾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해야 한다.(개정 2021. 3. 30.)

1. 디자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3. 디자인심사등록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라는 사실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

6. 디자인등록번호 및 디자인등록일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사실

나.법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다.법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라.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며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마.법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인 경우: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

11. 그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 내지 제5항 생략)

1) (개정전) 제7호부터 제9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01

[시행 2022. 04.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8호, 2022. 04.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등록출원인·디자인권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권의 회복 요건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500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권의 회복 요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3호, 2021. 10. 21.,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8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6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제6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u>정당한 사유</u> 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 심판의 절차를 특허 및 상표 심판 절차와 통일하기 위하여 디자인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연장권자를 특허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8호, 2022. 4. 19.,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1호, 2022. 12. 19., 일부개정]
제29조(기간의 지정 및 연장)	제29조(기간의 지정 및 연장) ★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위원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청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